

인터뷰/권리조약 5차 특위 다녀온 최경숙씨(2.15. 에이블뉴스)

“한국은 여성장애인 조항 신설 주장만 해놓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쇼 차원에서 조항 신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냐!”

이는 지난 1월 24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5차 특별위원회 첫 주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최경숙 공동대표가 전해준 특위 참가자들의 반응이다.

지난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린 제3차 특위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여성장애인 조항이 신설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각국 참가자들의 반응은 지지와 반대로 극명하게 갈렸다. 하지만 세계청각장애인연합, 세계시각장애인연합 등 국제 엔지오투들은 일제히 지지를 보냈었다.

“이번에는 엔지오투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성조항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고, 한국 정부의 후속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3차 특위이후 여성장애인 신설 조항 문제는 회의장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5차 특위에서도 여성장애인 조항 신설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초안에 담긴 조항을 검토한 이후에나 여성장애인 조항 신설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제5차 특위가 열리기전 국내 엔지오투들의 정세 파악을 달랐다. 이번 특위가 시작하자마자 여성장애인 조항 신설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 것. 최 대표는 “이번에 이 문제가 검토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광이 정책위원, 극단 끼판 김미연 대표 등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딛고, 자발적으로 특위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3명의 여성장애인들은 회의장 안에서 여성장애인 조항 신설문제가 다뤄지지 않자 회의장 밖에서 특위 참가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돌입해야만 했다.

“일단 첫 주 화요일에는 엔지오투 간의 모임인 코커스(Caucas) 관계자들을 초청해 여성장애인 신설 조항에 대해 얘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도 참석해 우리나라 여성장애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줬다. 신 대표가 우연히 유엔에 회의 차 방문하던 중이었다.”

여성조항 신설을 반대하는 쪽은 성적소수자, 원주민 장애인 등 마이너리티 그룹들도 자신들의 조항을 만들어달라는 욕구를 분출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장애인들은 ‘여성장애인은 마이너리티가 아니다, 장애인의 절반이 여성장애인이고 절반의 권리 보장없이 어떻게 권리조약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설득을 시켰다.”

최 대표는 지난 2월 3일(목)에는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대표들이 중심이 돼서 특별미팅을 열어 여성장애인 조항 신설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지에서 회의에 참가했던 김미연씨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같은 시간에 여성장애인 조항 신설을 반대하는 유럽연합 측에서 미팅을 가졌는데, 한국 측 미팅에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미팅을 끝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80여명이 미팅에 참가했다고 한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서 미팅에 참가하는 등 열기가 높아 여성장애인 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조항 신설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첫 주 조항 신설에 회의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첫 주 회의에 참가하면서 전 세계 여성장애인 엔지오투 간의 소통을 위해 'unwwd.org'라는 도메인의 웹 사이트를 개설해 향후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최 대표는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나 엔지오투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정부와 엔지오투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요일 미팅이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사실 그동안 정부나 엔지오투나 여성장애인 조항 신설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 김미연씨와 김광이씨가 귀국하면 만나 오는 8월 제6차 특위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펼칠 것이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현재 국제장애인계가 합심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 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6년 제정될 예정인 국제 장애인권리조약을 우리나라에서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실효성을 지니며, 그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UN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시를 받게 되는 등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 피한 중요사안”이라며 “이를 대비한 복지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조약체결을 위한 관련부처, 전문학계 그리고 장애인NGO 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조속히 구성, 전반적인 국내 장애인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며 “자문단 구성의 세부 추진계획과 정부의 이행계획 수립 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복지부 장옥주 장애인복지심 의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17일 대정부질의에 이어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우리 정부가 여성장애인 특별조향 시설을 제안한지 벌써 10개월이나 지났지만, 국내·외적인 사후작업은 전혀 진행된 바가 없으며, 국제활동은 고사하고 외교부와 논의테이블조차도 구성된 바가 없다”고 서면으로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특별조향에 대한 연구작업이 진행돼야 하고, 동시에 외교부와 협조를 통해 국제 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성장애인 활동가들의 인력풀도 충분히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2005. 2. 24. 에이블뉴스